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계획 전북 몫 찾기 '고군분투'

김윤덕 의원, 법 개정 노력 안간힘... 민주당 당서 선대위 조직혁신단 관계자 회의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은 "전북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제외되면서 낙후된 교통망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한 전북 몫 찾기에 앞장서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광역교통망 계획'은 거리가 가까운 볼 이상의 광역 시도를 기준으로 계획과 예산을 배정한다.

이같은 점은 전북도가 전주시 특례시 지위에 반대하고, 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특례시 지위에 실패하면서 법 개정을 통한 반영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에 기초한 정부의 광역교통 2030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70조, 지방 대도시 30조 등 100조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으로 전북 지체가 빠져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현재 법령상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빠진 전북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국토부 등과 끈질긴 협의 끝에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26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전북지역 조직본부 관계자들을 개최했다. (사진=김윤덕 의원실 제공)

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현재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광역교통망 계획에 전북이 포함 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주, 익산, 군산, 새만금을 하나로 묶어 세종시 배후도시, 광주, 대구와 연계된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을 통해 전북발전의 토대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전북지역 조직본부 관계자들을 개최하고, 설 연휴 및 앞으로 조직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절대 방심은 금물이다"며 "전북 지역 조직본부 책임자를 비롯해 민주당원들이 현장과 바닥을 뛰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결과가 5% 내외의 초박빙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한 명의 지지자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설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떠난 친인척, 지인 등에게 전화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진심과 강단을 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만이 전북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전북지역 조직본부가 앞장서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완성에 절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효성 기자

'일하는 사람 앞으로 노동존중 제대로'

민주 안호영 의원
"이재명 후보 대선후보 노동공약 실행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호영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이자 대전환 선대위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한 이재명 후보의 6대 노동공약을 앞장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노동공약은 크게 여섯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일하는 모든 사람 보장 강화,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중대산업 재해 감축, ▲노조할 권리보장, ▲주4.5일제 도입, ▲일자리 정책 대전환 등이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는 경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음에도 여전히 후진국형 노동문제가 산적

해 있다"며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호영 노동위 상임위원장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은 그동안 노동자가 지역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등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노동방이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도 시급한 현안들도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화하는 등 공약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효성 기자

"10만 특보로 대선 승리 기여"

이재명 후보 직속 총괄특보단 전북 특보 임명장 수여식

상임특보단장에 방용승

이재명 후보 직속 총괄특보단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제20대 이재명 후보 직속 총괄특보단 전북 특보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총괄특보단은 전국 단위 지지층을 확보하고, 각 지역의 핵심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 출정한 이재명 후보 직속 선거대책기구로 대선 종료까지 100만 특보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특보단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국회의원, 전북선대위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용승 전북상임특보단장, 조지훈 전북상임특보단장, 박희승 전북상임특보단장, 채정룡 상임특보단장, 김정식 상임특보단장, 김정호 상임특보단장 등 단장 부단장급으로 150여 명이 참석해 3.9 대선 승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이 고향인 정성호 총괄특보단장은 "전북은 여러 가지로 기대가 큰 지역이고, 이재명 후보가 1)지방의 차별, 2)호남의 차별, 3)호남 중에서도 전북의 차별 등 3가지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한 것을 전북도민에게 잘 설명해달라"며 "전북인의 손에 대한민국이 미래가 달려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특보 모집 및 이재명 후보를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선대위 상임위원장과 전북상임특보단장을 겸하고 있는 방용승 단장



이재명 후보 직속 총괄특보단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제20대 이재명 후보 직속 총괄특보단 전북 특보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제공)

은 "전북에서 10만 특보를 조직해서 대선 승리에 기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북 특보단이 수도권 지인을 지지자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는 ▲전북상임특보단장 방용승 조지훈 박희승, 채정룡, 김정식, 김정호(8명) ▲전북특보단장 방세영 신성욱, 이동규, 오순덕, 조승배, 김기영, 성현우, 김용진, 한병락, 김경태, 김문수, 고의정, 김영훈, 유학식, 최현규 (16명) ▲전북특보단장 황인주, 양희안, 이용일, 안길만, 추인

희, 유남욱, 고남욱, 김영태, 박문화, 신정아, 유영순, 이심순, 이한기, 김수정, 박세광, 윤길준, 임은두 (17명) ▲전북지방개발특보단장 김지연, 정책특보단장 송민섭, 동창욱, 박연춘, 박주홍, 이미욱, 최영은, 박삼영, 6차민생경제특보단장 김상민, 여성특보단장 이미경, 농업정책특보단장 이성원, 수소경제발전특보단장 송승룡, 지역균형발전특보단장 안호원, 플랫폼경제특보단장 김태인, 정황누리봉사특보단장 남대웅, 법률지원특보단장 최낙준, 교육혁신정책특보단장 김태인 (21명) 등이 참석했다. /유효성 기자

민주 #해시태그 선대위 지역살이 토크쇼 연속 진행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이하 선대위)가 지역살이 토크쇼 '서울이 아니면 돼' 프로젝트를 연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시태그 선대위 지역혁신단은 27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지역 문화와 네트워크, 선택권, 동물권, 지원사업 등을 주제로 2030세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7일 저녁 7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책인 '3501 문화비'를 공약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사용이 불가능한 배달업 서비스 등 사소한 메뉴 선택권에서부터 드러난 우리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29일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반려동물 진료비 및 기초검진 지원과 반려동물 관리 실태에 대해 반려인들과 함께 토론회를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2월 3일,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짚어보고 지역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어볼 계획이다.

한편,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 지역혁신단 지역살이 토크쇼 '서울이 아니면 돼' 행사는 오는 2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속 토론회에서 발굴된 정책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효성 기자

농어업인 치매 예방 건강검진 지원

민중신영대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업인의 치매 예방·치료·재활을 위해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군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국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반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치매의 예방 및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인프라가 부족해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교육·홍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효성 기자



6.1 지방선거 "저도 축하합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무주 만들 것"

황인동 전 무주 공무원노조위원장, 군의원 출마 선언



"꿈과 희망이 있는 무주군을 만들겠다"는 황인동(55·전 무주군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무주군 나선거구 군의원(안성·설천·무봉)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출마와 관련 "그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무주가 나아갈 방향과 무주발전의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무주군의회를 만들겠다"며 "의정활동으로 무주군민과 함께 꿈과 희망이 있는 무주군의 모습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제에서 의회 역할은 자치단체 견제와 감시를 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경쟁 관계가 되어야 한다"며 "군의원 역할은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를 넘어 자치단체의 미래를 고민하고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하며, 행정과 의회가 변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 전 노조위원장은 공직생활 28년 중 "18년 동안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왔듯이 제 자신을 군민과 무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남은 인생을 무주를 위해 바치고 싶다"며 "무주군의 미래 경쟁력 기반을 마련하고 함께 행복한 무주공동체,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전 노조위원장이 군의원 출마를 선언한 무주군 나선거구는 열한 지역으로 쪼개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상직,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담긴 등에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보낸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서시을·구수)이 항소심서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인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판사 김성주)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뉴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단해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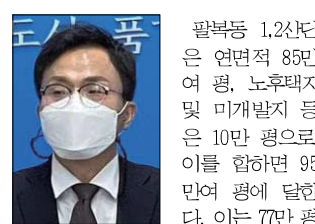
국회의원 정운천 의원이 26일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가축전염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ICT,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스마트 축사 지원 등을 통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첨단친환경축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효성 기자

"전주, 도시 리모델링으로 미래 준비해야"

이중선 전 靑 행정관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2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도시를 재구조화하고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등 자원을 바꿔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행정관은 "현재 도청이 위치한 서부신시가지의 조성 이후, 대규모 프로젝트가 거의 없었으며 그에 따라 전주는 상당기간 정체되어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도시구조의 개편이 아닌 단순 확장이 이어지면서 먼저 들어선 팔복산단이, 이후 조성돼 입주한 민성동, 송천동, 하카지구 등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불만사항으로 취급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팔복동 1.2만평은 연면적 85만여 평, 노후택지 및 미개발지는 10만 평으로, 이를 합하면 95만여 평에 달한다. 이는 7만 평인 서부신시가 지 면적의 1.2배가 넘는 면적이다.

이 전 행정관은 추정사업비 7천억원에 사업 기간은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산단 내 입주기업의 이점인증을 받아 산단단지 조성 후 제공, 용도지역을 변경 후 택지/상업용지로 제공하는 방식의 개발, 사업 이익금의 낙후지역,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개발 사업에 재투자 등을 제시했다. /김윤상 기자